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톨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톨아보기2021-016
- 수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목 [지역언론톨아보기] 스카이라인 지키기 위한 용적률 축소 추진, 건설사 입장에서 보도한 부산일보
- 날짜 2021년 6월 1일

스카이라인 지키기 위한 용적률 축소 추진, 건설사 입장에서 보도한 부산일보



지난달 26일 부산일보는 1면에 <부산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축소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에 포함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가에 하나둘 들어선 고층 건물과 생활형 숙박시설. 이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 과밀학급, 교통혼잡 등은 최근 부산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명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검토되는 것이라며 대구, 인천시, 광주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의 첫 문장에서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며 ‘용적률 축소’와 ‘주거용 시설에 오피스텔 포함’의 규제 강화 측면을 부각했고, 이는 박형준 시장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10만 가구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등으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가 공급 확대 공약에 역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일보가 5월 26일자 1면에 배치한 해당 기사와 관련한 내용은 부산시와 시의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부산일보가 아닌 다른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례 개정이 내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에 앞선 보도, 검토단계에서의 보도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이유 등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건설사와 토지소유자의 직격탄만을 걱정하며 ‘파장’, ‘논란’, ‘역행’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등 움직임에 앞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끝>